

남북정상회담, 하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인터뷰

인터뷰 · 정리: 이강민

사진: 황의선

이 인터뷰에 관해 『시사인물사전』측이 전해온 취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간 언론매체들로부터 비교적 외면받아 온 인물’을 해보자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을 통해 내보자’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취지와 아울러 해당 코너가 ‘지식인’이라고 들었을 때, 먼저 스치듯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 학부)였다. 마침 얼마 전 『근대의 그늘』(당대)과 『전쟁과 사회』(돌베개) 등 저서 두 권을 출간한 참이기도 했다.

‘소장 사회학자’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 계간 『경제와사회』 편집장으로, 그리고 강연자와 집필가로 하루하루가 바쁜 김교수를 만나기로 한 건 8월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막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사건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참석을 마친 김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넘어야 할 큰 산’

이강민: 안녕하세요. 이 인터뷰가 실리는 책이 『시사인물사전』인만큼, 시사적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역시 무엇보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잇따른 일련의 남북관계변화를 꼽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 일관된 햇볕정책의 성과라는 평가도 있고, 일각에서는 ‘남북한 지배계급간의 연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춘: 햇볕론의 성과인 측면도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까지 양보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김정일 정권의 상대적인 안정화와 북한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맞물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성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측면은 남한에 있다기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약간 후퇴한 북한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배계급간의 연합’이라는 건 지나친 계급주의적 설명이라고 봐요. 물론 일종의 정치적 타협인 것은 분명하고, 남한의 경우 내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파행을 덮어버리는 측면, 북한의 경우 경제라든가 인권의 측면을 덮어버리고 돌파하려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과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남북한의 상호 위상강화로 가는 길이지요. 지금까지의 적대적 상호 의존 상황은 남북한의 상호파괴로 가는 과정이었던 반면에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각국 수뇌들이 다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남북한 화해국면을 보면, 분단의 희생자와 수혜자가 누구였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울브라이트 장관이 한국에 와서 썰기를 박는 모습이라든지, 푸틴이 급거 북한을 방문하는 거라든지, 일본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라든지, 요 한두달 사이의 국제정세 변화를 보면, 그간 50년 동안의 상황이 누구에게 가장 이득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피해대중의 희생을 언급하지 않고 진행되

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야합의 차원으로 보는 건 소아병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강민: ‘첫 단추를 꿰는 사건’으로서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듯 한데요.

김동춘: 북한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푼 것은 굉장히 큰 양보인데요. 남한에서는 이걸 인도적인 문제로 보지만 북한에서는 체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개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북한쪽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아마도 내부 군부강경파나 보수세력들이 불만을 표시하겠죠. 김정일 정권으로도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니 쉽지는 않습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이후 언론의 태도를 보면, 보수세력의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이 약간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러한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부상해서 반동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한번은 치러야 할, 아주 높은 산이 결국은 국가보안법 문제, 미군 문제, SOFA 문제 등이죠. SOFA 문제는 비교적 국민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미군 문제나 전쟁범죄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전면적으로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전체가 흔들리는, 최후의 보루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정도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세력의 광풍’이 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 차기정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이강민: ‘광풍’이라고 표현하시니 서늘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노근리나 매항리,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SOFA 문제 등등을 봤을 때, 신문이나 TV를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선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주된 지배논리가 냉전주의적·군사주의적 논리에서 자본주의적·산업주의적 논리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김동춘: 광풍이 될지 어떨지 잘 알 수 없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SOFA 문제 같은 경우 어쩌면 오히려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까지 50년 분단체제를 지탱시켜온 기둥이었던 친미·반공 이데올로기 자체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선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철승씨 같은 사람은 ‘건국 이념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남한 사회를 정당화했던, (물론 거기에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에서부터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안보논리까지 포함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친자본주의가 반공주의와 결합한 형태의 논리들인데요. ‘막판의 보루’는 ‘그럼 우리가 북한식 통일을 했어야 했던 말인가’라는 거겠지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국 중심의 분단상황 유지’는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고집하는 걸텐데… 비단 전쟁을 겪은 70대만이 아니라 50대 이상 이 사회 기득권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 국가보안법이 철폐가 된다면,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를 대체하게 될 터인데요. 하지만 독일의 신나치 망령이나 일본에서 우익세력의 지속적인 집권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로 쉽게 대체될 것 같지는 않고, 극우의 목소리는 계속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반환점을 둔 김대중 정권

이강민: 예전에 어디선가 말씀하시길, 김영삼 정권에 대해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군부의 정치적 퇴출, 즉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부정치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낸 것일 거라고 하면서, 그와 비교해서 김대중 정권에 있어서는 극우해계모니를 퇴출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역사적 의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김동춘: 그게 중앙권력의 문제도 있고 지방권력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방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의 토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지방언론 등이 유착된 것인데, 그 지배구조는 아직도 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군사독재에 기생했던 세력이 이권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서 거대한 자본가가 되고, 다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좌우하면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건데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지요. 과거와 같은 원시적인 극우주의가 아니라 친자본의 논리로 변해가지고 그게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착근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행정부 쪽에서 보면 재정부 패권주의를 들 수 있지요. 군사독재하 경제정책의 핵심브레인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서 복지문제라든지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예산배분과정에서도 복지, 교육, 사회, 문화와 같은 부분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문의 '마피아'들이 아직도 군사독재시절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또, 언론권력의 상층부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총구로 시작했지만, 이후로는 그 총구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즉 정착이 되어 온 건데, 그 권력의 핵심에는 역시 여전히 극우세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계급구조상 숫자로는 몇 % 되지 않지만, 그 핵심세력들이 문화적·물적 자산과 자원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극우세력이라는 게 다 자본주의세력으로 정착돼 있는 거죠. 제가 DJ정부의 극우세력 청산을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그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안기부, 국방부, 재정부 같은 곳들, 그리고 국회에서 JP 같은 사람들을 퇴출시키면서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까도 기자회견장에서 노근리 사건 터뜨렸던 AP기자를 잠깐 만났는데, 미국은 어쨌든 단일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행정부, 여론 등이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사회인데, 한국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회라 빈틈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행정부처라든지 정치가라든지하는 사람들 누구도 거기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 극우세력 제거란 것은, 바로 그러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일테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조선일보』식의 논리가 더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 최장집 교수 사건 같은 것을 더이상 일으킬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강민: 언론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말이면 김대중 정권 임기가 정확히 반절이 지나갑니다. 반절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감안하면 그렇지도 못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청산작업이 임기내에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요?

김동춘: 별로 밝지 않죠. 이번에 날치기 한 것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한나라당에게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J가 설사 개혁적인 조치를 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는 힘들 거라고 보죠.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면서, 차기 대권을 둘러싼 갈등과 물밑 움직임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선거 직전의 이합집산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건 그 때 가서는 일사분란한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올해 정도가 사실상 DJ가 권력을 가지는 마지막 시기인 건데, 극우보수세력의 뇌관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폐지보다는 제7조 같은 독소조항 개정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강민: 금방 “DJ가 설사 개혁적인 조치를 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DJ가 그런 의도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웃음)

김동춘: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DJ가 상대적으로는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DJ가 원래도 좌파가 아니었고 이념적인 성향이 ‘중도우’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집권을 위해서도 계속 후퇴해왔기 때문에, 지금 봐선 ‘중도우’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젊은 의원들 몇 사람 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그래도 DJ가 개혁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개혁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죠. 개혁적인 게 있다면 북한문제나 남북관계 같은 분야인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형편없이 망가질 가능성, YS정권 말기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인 학살 속에 담겨진 ‘건국의 비밀’

이강민: 선생님이 얼마전 내신 책(『전쟁과 사회』, 돌베개)도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구요. 아까 참석하신 기자회견도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었던 같은데, 어떤 거였지요?

김동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5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 인도적인 관점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모른 채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용납하고 가는 사회가 과연 제대로 지탱될 수 있는 사회인가, 법이든 규범이든 도덕이든 혹은 정치든 제대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올 봄부터 심포지엄도 하고 유족회도 조직을 하고 해서, 9월 6일 전국 단위의 범국민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너무 모르고 있지요. 그동안 완전히 은폐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아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작년에 노근리 사건 터졌을 때 신문에 투고까지 했어요. 웬만해서 투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처음엔 『중앙일보』에 이것 좀 실어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다음에 『동아일보』에 글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실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게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기고’ 형태로서 「노근리 뿐이라…」라

는 제목의 글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마지 못한 것이라면 몰라도 한국 언론이 자체 취재는 안 한다고요. AP통신 나온 거 받아적으면 적었지, 절대로 자체적인 취재는 안 해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른바 ‘빅 쓰리’가 다 그래요. 이게 한국 언론의 속성이예요. 침묵의 카르텔이죠. 이런 부분을 좀 깨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 결정적인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민간인학살 문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이러는 건 아니예요(웃음). 하지만 이 문제를 잡고 흔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 이를테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급의 형성 문제라든지, 시민사회의 문제라든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안이에요. 동시에 무엇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을 지탱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정리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여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왕따의 문제이기도 하고, 군사주의적 억압에 대한 민중의 복종과 수동성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고, 행정권력·공권력의 남용도 그 기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강민: 현재와의 관련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김동춘: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왜 우리가 분단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서로 적대를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들춰내야 평화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좌익은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되고 있어요. 그 논리가 사회적으로 뒤집어져야만, 그리고 정부가 그 논리를 공식적으로 후퇴시켜야만, 그래서 좌익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지금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롯데호텔 진압 같은 경우도 보면, 노동자들을 전부 다 꿰어앉히고, 머리 이렇게 팍 숙이게 하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건 정말 야만적인 겁니다. 그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것이지, 범법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건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한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아서라고 봐요.

그리고 남북간에 군사적인 충돌이나 외국과의 전쟁 비슷한 상황에 돌입한다면, 50년전 6·25 때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곧바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우리 같이 좀 뼈딱한 사람들 체포·예비구금할 것이고, 민간인들 행동 통제할 것이고... 이런 조치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전시·준전시상황에서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죠. 사람의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목숨이 되고, 개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할 겁니다.

『조선일보』 거부 지식인선언

이강민: 앞에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소설가 황석영씨의 동인문학상(조선일보사 주관) 후보 거부 파문도 있었어요, 엇그제 신문에 보니 김동민 교수 등이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지식인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도 거기 동참한다는 기사가 났던데요. (인터뷰 이후인 8월 7일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다. - 필자 주)

김동춘: 아, 저도 서명하기로 했어요. 저 개인적 소신으로는, 『조선일보』에 기고나 집필을 거부하는 지식인 ○○인 선언'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조선일보』에게 실제로 충격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최근 황석영씨처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아직도 『조선일보』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선일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적어도 30~40% 이상의 독자들에게는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불매운동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런 방법이 바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로선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이 해왔던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강민: '30-40% 독자'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독자는 『조선일보』의 성격을 알면서도 본다는 의미입니까?

김동춘: 제가 『인물과사상』에서 봤던가? 30~40% 독자들은 예전부터 봤으니까 그냥 보는, 타성적인 독자라고... 강준만씨 글에서 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히 농촌에서 많이 봐요. 지방의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판매망 자체가, 다른 신문들 예를 들어 『한겨레』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있어요. 읍단위 이하의 경우에는 『한겨레』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즉, 그 판매망 구조라는 게 독자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돼있는 거고, 과거의 군사정권시절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죠. 이걸 소비자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번에 이문열씨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어찌란 말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시장자본주의가 관철되는 나라처럼 우리 사회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연결망이라는 건 다 군사독재가 구축해놓은 행정망과 조직과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커나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까 말한 30%가 아닌 독자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의 극우반공주의 이념을 지지한다기보다도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겠죠. 전철 안에서 보면,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이 대개 20대 아니면 50대 이상이더라고요. 20대의 경우에는 보통 이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신문을 잘 만들고 또 다양하고 색다른 기사들도(웃음) 많이 넣고 하니까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 독자들 구성 중에는, 물론 정말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상업적인 이유로서 자기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타성적으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준만씨가 이야기하는 반조선일보 논의에 동조를 하면서도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는 게, 『조선일보』를 보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듯이, 『조선일보』도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는 상당수 사람들은 위에 말한 그러그러한 이유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지식인들이 이러한 액션을 취한다는 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조선일보』가 1등신문인 한 민주화는 불가능

이강민: 이문열씨는 자기 소설책이 가장 많이 팔렸더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베스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웃음). 강준만 교수가 『조선일보』 보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반조선일보 운동이 한국사회개혁이나 공론장의 왜곡 시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시는 거네요?

김동춘: 그럼요. 그 생각에는 전 동조해요. 『조선일보』가 현재와 같이 ‘1등신문’으로 남아 있는 한,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도 불가능합니다. 노동운동쪽에서도 이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당하기는 맨날 당하면서도 언론개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답답한 일이죠.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인 거고, 대중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노총 50만, 한국노총 100만 중 10만 명만 움직여도(틀림없이 『조선일보』 독자 10만 넘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겁을 낼 거라고요. 독자가 5만명만 떨어져도,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밑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치받을 거라고요.

이강민: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논리에 비판적인 사람들 일각에서는 각 신문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어쨌든 매체를 통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김동춘: 강준만씨가 모든 잣대를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두고, 한번 글을 실으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근본주의적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 앞에서 『조선일보』를 마구 욕해대고 그러는 건 과거 80년대식 운동권의 논리랑 비슷한 거 같아요. 『조선일보』에 대한 판단을, 모든 정치적 판단의 잣대로 보는 것은 또 하나의 근본주의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전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보적 지식인들이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는 경우, 『조선일보』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보다는, 그것을 신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내부규율과 자기검열을 통해 자신이 길들여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조선일보』를 객관성있는 신문인 양 포장해줌으로써 그 신문을 더욱더 발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죠. 적어도 ‘빨갱이사냥’이나 하고 최장집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그러한 극우매체에 진보적인 인사가 기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다리 걸치기’에 대해

이강민: 이제 선생님 개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전쟁과 사회』를 내셨는데, 원래 한국전쟁 관련된 저서를 두 권으로 낸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김동춘: 그게 방향이 좀 수정되었어요. 책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원래는 ‘한국전쟁의 영향’을 다룬 책으로 두 권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의 영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국전쟁 시기 당시의 사회적 측면을 다룬 연구가 너무 없어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계획대로라면 그 두 권 이전의 것이죠.

이강민: 그럼, 다시 두 권을 더 내시게 되는 건가요?

김동춘: 지금은 보류 상황이에요. 조금 지친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야 하는가 회의도 들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다룰 것인가는 좀더 쉬면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이강민: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는 소리입니다만, 선생님의 작업이 역사학자와 비교할 때 차이는 뭔가요. 아니, 진부한 질문이겠지만, 선생님은 역사학자입니까, 사회학자입니까.

김동춘: 그야 사회학자죠. 역사학자 아니죠, 분명히. 제가 이런 작업을 한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위엣것이 보이는, 그런 기본적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다른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해봤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말한다는 건데, 제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좀더 실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데, 역사를 통해 현실에 대해 말한다는 건 좀 우회적인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제 역할이 필요없다면, 실천가들이 많아서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작업을 좀더 천착해서 2부작, 3부작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운동진영에서 내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제가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문제가 걸리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해야 하기 마련인데요.

이강민: 여기서 무식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실천운동가입니까, 연구자입니까.

김동춘: 연구자죠. 운동가는 아니에요. 저는 연구자에 더 아이덴티파이(identify)되어 있는 사람이고, 할 수만 있다면 연구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싶은 생각이예요. 그러나 상황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들테면 70~80년대라는 시대는 학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 운동가가 되었고, 내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정국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가 70~80년대 같은 상황이라면 학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없는데 무슨 놈의 학문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특히 사회과학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응당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는 일이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역사를 앞당기는 일임과 동시에 학자라면 당연히 그 일부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존립의 문제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자연과학자라면 몰라도,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아직 학자가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뿐만 아니라 신문 칼럼니스트 역할도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도 들지만, 제 글을 읽고 생각이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타를 당했는데도 왜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는가

이강민: 지금을 ‘학문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아닌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춘: 아, 제가 이야기한 정치는 좀 넓은 의미의 정치예요. 예를 들면, 박사학위논문들

쓰는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와 충돌했을 때 그 교수가 입장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아직도 '정치적 시대'인 거죠. 연구자가 자기 의견을 정확하고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건 물론 아주 이상적인 가정일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적어도 8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학자가 자기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러나 미시정치랄까 학문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젊은 학자들이 대학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좌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줄서기'가 계속 강요되는 거고, 교수들 있는 곳에서 손바닥 비비고, 잘 보여야 되고, 방긋방긋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웃음). 아직도 그런 문제는 있지요.

이강민: 그런 의미로 '정치적 시대'를 규정한다면, 당분간이 아니라 무척이나 상당기간 그 시대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동춘: 그렇게 봐도 좋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학자로서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은 되었다고 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면,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강민: 어쨌든 지금 선생님은 실천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에 참여한다고 할 때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참여연대를 처음 결성할 때부터 많이 관여했고, 지금은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다른 단체가 아닌 이러한 '시민단체'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동춘: 우리 사회의 '미완의 민주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계급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화의 문제가 좀더 완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형성이나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저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왜 단병호 위원장이 머리를 깎았는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은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단병호 위원장이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50만 조합원은 무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노동계급의 문제냐, 시민사회의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부족 문제 이전에 시민사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타를 당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동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국민이고 시민이다, 저의 답은 그겁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계급적 분노를 느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민주화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참여연대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하위 파트너'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연대가 체제유지에 기능하는 측면보다는 핵심기득권세력을 위협하는 측면이 아직은 더 많다고 봐요. 참여연대와 같은 운동이 더 활성화될수록 노동운동이 성장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한 건 아니에요. 참여연대의 핵심적인 간사들과 만난 것이 93년 경이었고, 같이 틀잡는 일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 자리잡지도 못하고 곤곤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못 하고, 안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죠.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기업별 노조운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인 입장이나 소신을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게 제 변명처럼 들릴 지 모르겠는데, 왜 민주노총 같은 쪽에 노동연구자들이 제대로 개입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연구자들 중에 누가 민주노총쪽의 이데올로기로 활동하고 있는가? 안 보이잖아요. 연구자의 입지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노조운동이 입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할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양쪽에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강민: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강령기초작업에도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요.

김동춘: 민주노동당도 약간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민주노동당도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소신을 펼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있는 거죠.

이강민: 그렇다면, 장차 앞으로 조건과 기반이 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식인의 독립성과 당과성을 어떻게 볼 건가와도 관련된 문제일 듯 한데요.

김동춘: 그건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독립적인 연구자로 남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제가 '당비'를 냅니다. 참여연대 규정 때문에 공식적인 당원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제가 무당과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의 힘은 독립성과 자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당의 입장이 자신과 배치될 경우 목소리를 죽여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거죠. 저로선 내 나름대로의 학자 입장을 견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직업 정치가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당에 가서 무게를 실어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직업 정치가가 된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몇 십년 후까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격상으로도 직업 정치가가 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이강민: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음기를 끄고 : 글쓰기에 대하여

'공식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점심식사로 냉면을 같이 들게 되었다. 좀더 편안하게 여러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글쓰기에 대한 것도 있었다. 녹음기를 끈 뒤 나눈 대화였으나, 김교수의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혼자만 듣기엔 아쉽다는 생각에 노트필기에 의존한 것을 옮긴다.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 '본문' 대신 이렇게 '추신'에 밀려날만큼 덜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이강민: 선생님 글에 대한 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7월에 참여연대 강좌를 했는데 김교수의 강연에 등록한 30~40명 중 상당수가 '선생님 팬이기 때문에 왔다'는 말을 했다. 그 중 4~5명은 '꼭 찍어서' 강준만 교수의 소개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김동춘: 하하. 그거 이상한 현상 아닌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이강민: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야죠(웃음).

김동춘: 저 같이 80년대적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구시대적 인물’이 말예요. 하하. 그렇지 않은가?

이강민: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긴데요. 선생님 글은 내용적 측면도 그렇지만, 그것과 결합된 글 스타일면에서도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창작과비평』에 쓴 글을 보니 “특히 한국의 사회과학이 긴 호흡을 갖고서 이 문제(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근대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시 문학과 역사로부터 여러가지 감각을 배워야 하리라 생각되고…”란 부분이 있던데, 선생님 스스로가 그러한 역사적인 것, 문학(문화)적인 것들을 사회학적 상상력에 잘 결합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춘: 요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는데, 자원봉사해주는 친구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쓴 것도 좀 찾아보래요. 지금 너무 딱딱한데, 그런 거 올려놓으면 재밌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80년대 초중반 같은 때 쓴 걸 좀 찾아보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출간된 적은 없는 것들인데, ‘이문열론’ 같은 일종의 문학평론이나 동양사상 독후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사회학 논문을 쓰기 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이 좀 밑천이 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만 아니라 우리 때는, 80년대 학번하고 좀 다른 게, 인문주의적인 전통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운동권 학생들, 사회과학 쪽 학생도 김우창 선생이나 고은, 김치수 이런 분들의 글은 1학년 때 다 읽는 분위기였죠. 80년대식 기준으로 보면, 독서의 경향과 폭이 확고한 맑시스트는 아니었던 거지만, 반면에 다양한 형태의 한국 역사, 문학, 철학 같은 책들을 접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이강민: 그러고보면, 저희 같은 90년대 학번은 확고한 것도 없고 다양한 것도 없으니 어디서 밑천을 찾아야할지...(웃음). 글쓰기를 할 때 선생님 나름대로 염두에 두는 지침이나 계명(誠命) 같은 게 있나요?

김동춘: 그런 게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의 ‘현대판 버전’이랄까... 최고의 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다, 그러려면 우선 글이 진실해야 하고, 현실을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글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런 거죠. 다산의 글 중에 장애인의 슬픔이나 여인의 혹독한 시집살이 같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글이 있어요. 다산이 여성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어떤 유학자도 그런 글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다산 자신이 불우하고 비참한 처지를 겪어서 그런 게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마음이 글에 담겨져있을 때, 그게 감동을 준단 말이죠. 저는 논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쓰는 논문은 서양 학문의 글쓰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우리 인문학적 전통과는 달리, 아주 드라이한 것만 남게 된 거죠.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미국사회학회의 학술지) 이런 거 보면 아무도 읽지 않는 글들이죠. 학자들만 읽죠. 저는,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을 뭐하러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직도 한편으로 있어요.

이강민: 그러한 것이 글을 쓰는 마음가짐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김동춘: 조망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면 좀 공허하죠. 분석에 초점을 맞추되 여러가지 전망을 같이 모색하는 쪽으로 글을 씁니다. 정책대안 제시 같은 것에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보다는, 전반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전제된 위에서의 약간의 전망이랄까.... ‘문제’와 ‘주의’라는 게 대립되는 두 가지 사항인데, ‘문제’는 사실을 규명하는 거고 ‘주의’는 이론을 내세우는 거죠. 그걸 조화시켜서, 문제를 제시하되 실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강민: 사회과학적인 글에 글쓴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는 어떤가요? 책 서문에 “굴곡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는 역시 ‘냉정함’이 견지될 수 없었다”는 표현도 쓰셨던데요.

김동춘: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무시하지도 않아요. 사회과학 논문이라고 해서 너무 드라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적절하게 하려고 하죠.

이강민: 그동안에 논문 말고도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걸 묶어서 출간할 계획은 없나요?

김동춘: 그렇잖아도 이야기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칼럼하고 에세이 합쳐 지금 두 권 분량은 되는데... 그런데 전 약간의 저항감이 있어요.

이강민: 어느 책 뒤 「연보」에서 읽은 걸 생각하면, 그런 저항감이 이해가 갈 듯 합니다.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적 자아를 드러내는 글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씀...

김동춘: 맞아요. 그런데 계몽적인 역할을 생각하면 그런 칼럼집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논문을 읽지 않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책이 사회현상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한테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도인 거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황의선: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함석해있다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서 반응을 보시는 건 어때요?

김동춘: 하하, 그래볼까...

김동춘 교수

김동춘 교수. 그는 스스로 “한국의 사회과학도 중에서는 다소 유별나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가 ‘유별난 점’은 그러한 관심분야의 소재(所在)만이 아닐 것이다. 그의 연구작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과학도 중에서 유별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이론에 폭넓은 현대사 연구를 접맥, 내용을 풍부화시키고 동시에 이론적 재단을 경계하는 점도 그렇고, 가족주의, 민족주의, 분단체제, 과잉교육열 등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특수성’과 ‘독특함’(서구학문에서는 으레 ‘주변적·잔여적 범주’로 밀려날법한)에 대해 꾸준히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리저리한 자리에서 많은 언급을 남겨놓은 바 있다. “우리 사회는 (….) 개인 혹은 ‘경제인(=육망 추구적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은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조직, 소비와 저축, 정당과 선거, 노사 갈등, 교육문제, ‘북한적 현상’, 기독교 현상 등 많은 사회현상은 이러한 서구 사회과학의 이론·개념·인간관으로서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다.” “한국의 노동현실·노사관계·노동정치 특성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한국사회의 가족·계급의 동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피부로 느껴야했다.”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리 어느 영역도 ‘한국이 자본주의다’라는 보편규정만으로는 매우 제한된 설명밖에 제공할 수 없다.” 등등.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이에 대해 ‘특수주의’에 빠질 위험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작금의 한국 사회과학에 대해서라면 그러한 지적이 한참 더 나온다고 해서 지나쳐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라는 부제를 각각 단 두 권의 저서를 낸 김교수는 지금은 ‘교육과 노동의 연관’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박사과정 전공이기도 했던 ‘노동문제’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라고 한다.

어느 문학인에 대한 글에서 본 표현을 빗대어 말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과학 교수로서 그보다 더 서구 이론에 대해 정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운동가로서 그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학자로서 ‘한국사회의 문맥을 읽어내는’ 측면에서라면 그는 누구에게도 상석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력

1959년 경북 영주 출생

1982년 서울대 지리교육과 졸업(77학번)

1984년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졸업(논문: 「4·19의 발생배경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1993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졸업(논문: 「한국노동자의 사회적 고립」)

1997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현재 계간 『경제와사회』 편집장, 계간 『역사비평』 편집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저서

- 『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 1991, 박태순씨와 공저)
『한국사회노동자연구』(역사비평, 1995,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작과비평, 1997)
『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 1997)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당대, 2000)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

홈페이지

<http://green.skhu.ac.kr/~dckim/>